中 유학생 10중 9명 학교 밖 거주

'1일 1회 유선체크'… 양심적 자가격리에 떠는 대학가

학생행동 직접 확인은 불가
사실상 통제는 어려운 상황
대학가 "정부차원 관리했어야"

26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 원룸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불안감이 대학가에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숙사가 아닌 대학가 주변 원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중국 유학생 기숙사 수용율은 대부분 10% 미만이다. 10명 중 9명은 학교 밖 오피스텔이나 원룸촌에 거주하는 셈이다. 사실상 이들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196개 대학의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2.1%다. 소재지별로 수도권(17.7%)은 비수도권(25.4%)보다 열악하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비율로 대부분 3~4인실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부 중국 유학생 대응지침대로 1인1실을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크게 낮아진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가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숙사 외국유학생 수용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1실을 배정할 경우 경희대, 성균관대, 건국대, 한국외대, 연세대, 숭실대, 우송대, 이화여대, 단국대, 서강대를 제외한 7곳은 절반 이상 수용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이들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용 비율을 보면, 최소 11.0%(홍익대) ~ 최대 56.8%(우송대)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지난해 기준 3839명)의 경우 입소 희망자는 480여명으로 나머지 3400명 정도는 학교 밖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지내게 된다. 나머지 대학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성균관대도 중국 유학생 3330명 중 100여명 이외 다수 학생은 학교 외부에 거주하기로 했고, 중앙대 3199명 중 80여명, 고려대 2508명 중 180여명, 한국외대 1810명 중 80여명, 연세대 1400명 중 30여명 수준이다.

대학들은 학내 교직원과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외부 자율격리 대상 유학생들에게 매일 유선으로 발열과 상태 점검,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외출하거나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학 교수나 학생 확진자도 나오면서, 대학가가 코로나19 확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26일 서울시내 추가 확진자 11명 중 동작구 여대생 A 씨(21)가 포함됐고, 울산시 남구 거주 대학생 B 씨(21)도 이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자로 분류돼 울산대학병원에 격리입원됐다.

대구에 이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부산 소재 부산대는 지난 21일 겸임교수인 확진자 C 씨(48)가 교내 통합기계관 2층 실습실과 인근 식당을 들른 사실이 확인돼 24일부터 학교 기계관 1,2층 도서실과 카페 등이 폐쇄됐고, 접촉한 교수 3~4명과 일부 직원이 자가격리 조치됐고, 앞서 24일 법전원도 확진자가 다녀가 출입이 통제됐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애초부터 중국 유학생 입국을 차단해 격리시설로 보내 자율격리토록 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의 기숙사 규모를 파악하고 있을텐데, 기숙사에 최대한 수용하고 나머지는 1일 1회 유선체크를 하라고 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중국 유학생 입국을 아예 차단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우한교민처럼 정부차원에서 2주간 격리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하루만에 방역 끝낸 국회, '코로나3법' 개정안 처리

감염병 유행지역 외국인 출·입국 금지
환자검사 거부시 벌금·의약품 수출제한

국회는 26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법률안과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현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 19 방역 문제로 국회가 일시 폐쇄되면서 임시국회가 멈춘 이후 만 하루 만이다. 앞서 국회는 24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본관과 국회의원회관 등에 방역 작업을 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코로나 3법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과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한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과 관련해 지켜야 할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해 조치할 근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 지급,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정보위원장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한편, 24~26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3월 중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2~4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 일정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3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먼저 움직이는 기업들 "사업장 내 감염 철저히 대비"

열화상카메라 등 직원 관리
선제적 폐쇄·방역 조치 효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산업현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비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공포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최근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곤혹을 치렀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구미사업장을 일시 폐쇄했고, LG전자 인천 VS사업부 연구동도 방역을 마쳤다. SK하이닉스도 밀접접촉자가 생기면서 이천사업장과 청주사업장 일부를, 한국지엠도 의심자 발생으로 GM테크니컬코리아 건물을 폐쇄후 방역 조치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사업장이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 발생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근무자들이 공포에 휩싸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사측이 여러 조치를 시행중임에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주요 사업장 인근에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중이다. 2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여러 공장이 밀집한 대구 및 경북 지역은 확진자가 944명에 달한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해 있는 울산도 3명이고, 르노삼성자동차 공장이 있는 부산도 51명으로 급증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이 있는 충북은 5명,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업장이 몰려있는 경기도도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소문이다. 각 업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역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소속을 파악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25일에는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확진자가 모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소문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공포를 호소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확진자 신상을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아 일어나는 촌극이다.

업계는 일단 사업장 내에서는 감염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열화상카메라뿐 아니라 체온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 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서다.

확진자라도 증상이 발현하기 전 잠복기에는 감염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도 차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염을 조심하긴 해야하지만, 업무 효율 우려도 적지 않다"며 "공포가 너무 과열된 분위기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를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우리은행

개인뱅킹 수수료 면제

그룹 역량 총동원, 고객 금융지원
최대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 유예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대응 테스크포스(TF)'를 그룹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의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대고객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대인접촉에 따른 불안감 해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전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음식, 숙박, 관광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4000억원 규모로 신속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적 영업실적 악화로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출만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카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이용고객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2~3개월 무이자할부 지원은 물론 카드론 등 카드대출 금리인하 및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우리종합금융도 그룹 차원의 전사적 지원 대책에 동참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만기를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은 "이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특히 수 천만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과 카드 부문 등에서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